노동 포커스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하여

장 지 연*

한국노동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을 맞는 시점을 계기로 우리사회 노동현실을 차분히 돌아보고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특집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중 또는 삼중으로 분절화되어 있다는데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생기는 상태를 염두에 두면서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이환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신자유주의적 분절노동시장'이라고 개념화한다. 흔히 이중노동시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지만 기업규모, 원하청관계, 성별분절 등 복합적이고 파편적인 구조를 더 잘 드러내는 개념으로 분절노동시장이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분절성을 인지하지만 신자유주의적 성격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것은 이론적·경험적·정책적으로 대립되는 입장들을 절충한 것인데, 앞으로도 이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이환은 복합적인 분절 구조 중에서도 기업규모 간 격차를 줄여나가는 조율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분절 양상에 비해서 기업규모 간 격차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병유는 노동시장 분절 구조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정이환과 비슷한 결론에 다다른다. 분절의 정의를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 격차와 이동성의 제약이라고 볼 때, 분절을 초래하는 중요한 기제는 기업규모이다. 일자리 지위 간 이동성은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소규모 사업체에서 대규모 사업체로의 이동이 가장 힘들다. 분절화의 구조는 3개 집단으로 나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각 집단의 상대적 규모는 20 : 30 : 50 정도로 추정된다. 상층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시장 구조와 장기비전을 고민할 때 자영업 문제를 빼놓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승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수는 1990년대에는 증가하다가 2000년 이후에는 500만 명을 약간 하회하는 수준에서 정체상태에 있다. 소득측면에서 보면, 자영업자의 소득은 임금노동자 임금의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jchang@kli.re.kr).

75%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과정이나 일하는 양태에 주목해 보더라도 자영업과 임금노동자의 중간적인 형태를 보이는 사례가 많다. 플랫폼경제의 진전은 이러한 사례를 더욱 확산시킬 것이다. 자영업자를 사업주로 보아 여러 가지 보호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포용(inclusiveness)은 연대(solidarity)를 통해 달성된다. 조성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 연대임금전략을 제안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하청기업들의 지불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임금을 중심에 두고 원하청 간 계약이 성립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터혁신'은 첨단기술혁신 위주로 경도된 우리 사회의 시각을 바로잡고, 노동의 인간화를 지향점으로 설정하는 핵심 키워드이다.

차별은 사회정의에 반한다. 명백한 차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지나치게 큰 격차는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강성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노동법의 포용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정립, 임금격차의 공개, 시간·임금의 조화와 선택, 초기업 교섭·협약의 촉진은 시급한 정책목표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의 틀은 기존 노동법의 틀을 재구조화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보호대상은 전통적인 임금노동자와 고용형 자영자, 그 외 모든 자영자의 3단계로 설정하고, 적합한 보호의 수준을 적용한다.

고용안전망은 좀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장지연은 주장한다. 그간의 발전경로에 의존한 사회보험제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전반에 보편주의가 관철되어야 한다. 기본소득과 이념적 뿌리를 공유하지만 보다 현실적 대안인 '사회적 인출권' 개념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근로이력에 연동되지 않는 급여제도의 도입, 그리고 기존의 실업보험제도를 소득관점에서 재설계하여 모든 취업자에게 적용하는 개혁안을 제안한다. KLI